데스크시각

'법대로'에는 정의가 없다

윤영기
사회부장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네요." 최근 아는 사람이 전화를 통해 건네 온 걱정 섞인 말이다. 그는 아마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5·18단체들에게 110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광주일보 기사를 보았던 모양이다. 그의 말에는 난맥처럼 얽힌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짙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5월 단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이상 농성 투쟁을 통해 문화전당 건립 부지에 포함돼 철거될 예정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을 존치시켰다. '5·18 시민군 최후 항쟁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5월 유족과 5·18단체 등이 사투 끝에 이룬 성과였다. 구상권의 불씨는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지폈다. 대림산업 등은 2년 동안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문화전당)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10억 원을 받아 냈다.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만큼 문화전당 측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했다. 결국, 법리 검토를 거쳐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문화전당이 2016년 1월에 금액을 업체에 물어 주었으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한(3년)은 2019년 1월까지였다. 하지만 3년짜리 시한폭탄은 금기였다. 피폭 범위가 뚜렷한 폭발성 때문이다. 옛일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5월 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또다시 척을 지게 되는 것이 그 첫째였다. 설상가상으로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면서 2차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상권을 철회하면 기관과 직원 등이 직무 유기 등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진퇴양난이었다. 문화전당은 그렇게 버티다 10월 현재 구상권 청구 소멸 시한을 불과 4개월 남겨 두는 처지에 몰렸다. 다행인 것은 문화전당이 5월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왔다는 점이다.

때늦은 손해 배상 청구서

문화전당이 쥐고 있던 '시한폭탄'은 정부에 넘겨졌지만 명쾌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 단체와 면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낀 데서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 물론 정부는 구상권 철회의 명분을 만들고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세도 방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34억여 원에 달하는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을 때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내상을 입은 기억을 아직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야당으로부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등은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법의 범주에서만 해법을 찾는다면 딱한 노릇이다. 구상권은 민사적으로는 금전적 피해 구제와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지만 압도적 지위에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징벌적 성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 100여 명과 노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액 11억3000여 만 원을 받아 낸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해고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가압류조치까지 취했다.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정부의 합법적 조치였음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광주는 어떨까. 110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5·18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보복으로 인식될 것이다. 더구나 소송의 당사자는 도청 별관에서 절규했던 5월 유족과 단체 관련자들이다. 5·18 당시 옛 전남 도청에서 최후까지 싸우다 절명한 희생자들의 유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치 않겠지만 국가 폭력의 희생자에게 경제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셈이 되고 만다. 액면 그대로 '법대로'의 한계다. 그러니 적어도 헌법에 5·18 정신을 새기려는 정부라면, 접근 방식에서부터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 5월 역사 현장 복원이라는 맥락에 실마리가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옛 전남 도청을 광주시와 협의해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전남 도청과 구상권 청구의 발단이 된 전남 도청 별관은 부속 건물이다. 따지고 보면 5·18 최후 항쟁지를 단순 시설로 접근해 철거하려 했던 역사의 무지에서 사태가 비롯한 정부의 책임도 있으니 이제 옛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승적 차원 해법 찾아야

상식적으로도 해법은 없지 않다. 구상권 문제는 정부가 당시 광주시 및 5월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별관 존치를 결정했을 때 향후 법적으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불가역적 합의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정부가 사후적 정의를 실천하는 선에서 구상권 행사를 철회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구상권이라는 갈등 비용을 슬기롭게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국책 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그 중심에 있는 문화전당 활성화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문화전당은 설계 당시부터 랜드마크 논란을 비롯해 옛 전남 도청 별관 존치, 본관 복원 등 거듭된 논란으로 활성화가 지체돼 왔다. 정부가 구상권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한다면 전당의 활성화는 물론 광주의 민심을 한꺼번에 잃게 될 것이니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꼴이 될 것이다. /penfoot@

은펜칼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광주

박홍근
건축사·포유건축 대표

필자는 2017년 8월 '아시아문화전당과 나는 답답하다'란 제목의 은펜칼럼을 쓴 적 있다. 옛 전남도청 일원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일련의 과정을 바라본 시민으로서 "옛 전남도청 복원"이라는 주장과 이에 반응하는 지역 사회 대응 역량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담았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9월 7일 '옛 전남도청 복원 연구계획 대국민 설명회'가 있었다. 2년여 간의 오월어머님들과 진보단체 주장이 받아들여져 복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행사였다. 문화전당 설계안은 2005년 말에 결정되었다. 그 이전과 이후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서로 합의에 의한 결과였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그런데 다시 이를 부정하고 원점 또는 복원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해 할 수 없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를 거쳐 오늘까지 온 것을 비민주적 방법으로 되돌리는 건, 또 하나의 폭력이다. 오월어머님들의 마음은 일부 이해하지만, 2004년부터 그간 전개 과정을 볼 때 현재의 복원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이런저런 권력 가진 분들의 큰 흐름은 '복원'이다. 참 답답하다. 그래도 복원한다고 하니 필자도 몇 가지 염려를 나눌 권력(?)을 누려보려 한다. 첫째, 건축 구조와 기회 비용이다.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은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만, 나머지 경찰청과 민원실 건물들은 내부가 완전히 변형되어 있다. 외관만 원형으로 있지 내부는 구조 성능 향상과 현 전시 기능에 맞게 공간이 바뀌었다. 특히 도청 별관은 문화전당 주출입구를 위해 일부 철거 후 철골 프레임으로 형상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구조 보강을 하여 오월단체가 임의 사용하고 있다. 안되는 게 없는 세상이다.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 비용을 생각해보자. 또 수백억 원을 모조품으로 되돌리는데 쓰겠다는 것인가. 이를 위한 기회 비용 상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둘째, 원형 복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원은 어디까지인가. 80년 5월 항쟁 당시로 복원한다고…. 그럼 복원 후 그 공간은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 말이 없다. 복원해 놓고 보자는 것인가. 그 많은 어려움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복원했다고 치자. 그 박제화 된 공간이 오늘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음을 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외침도 안다. 역사의 물질적 형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형상의 많고 적음 보다는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어떻게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월의 역사적 교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이 '대동단결'로 항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이 핵심이다. 이 정신을 잊고, 물질에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셋째, 원형 복원으로 없어지는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은 어디서 채울 것인가? 문화전당은 다섯 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유기적, 보완적 관계로 역할토록 만들어졌다. 민주평화교류원과 방문자센터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 제시 없는 권력자들의 단편적 판단만 난무함이 아쉽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유적 보존과 문화전당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별관 보존으로 문화전당 주 진입로가 옹색하게 되었고, 광장 기능이 살지 못하는 것을 잊지 말자.

국립아시아문화정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난이 많다. 그리하면서도 전당 출발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누가? 우리가…. 지역 권력자들은 대안 제시보다는 애매한 지적과 후퇴하는 결정을 한다. 지역이 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하면서 중앙을 바라봐야겠다. 오월단체들의 행동에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다. 오월정신인 '민주'와 '대동단결'의 깃발은 없어지고, 없어진 깃발은 일부사람들의 '완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목소리다. 만약 완장으로 여긴다면 제대로 '민주'와 '대동단결'의 오월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원성도 듣는다. 수면아래서 부글부글 속앓이하는 시민들도 많다. 광주를 과거로 후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우리 행동은 내일의 역사다.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헛바퀴 도는 누를 범 하지 말아야 한다. 광주는 현재의 우리만 사는 곳이 아니다. 우리 자식이, 후손이 살 곳이다. 과거에 매몰돼 미래 비전을 제시 못하고 후퇴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월의 깃발이 광주 발전의 깃발이 되길 기원해 본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 고

사람다운 삶

양홍
현대문예작가회 회장·수필가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옛글(古語) 시간에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사람인(人)자를 여덟 개 쓰시고는 학생들에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셨다. 학생들은 저마다 야단이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는 해석이 가능했다. 결국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셨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마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그 사람이 사람이지" 평생 목사로 살면서 얼마나 큰 교훈이 됐는지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외우며 살아왔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4차 산업 혁명 시대라 부르기 시작하고 있다. 한 마디로 더 풍부한 물질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인 것이다. 더욱 여유있는 풍성한 대중적 조직화가 된다는 말이다.

사람은 풍요로운 물질이 관심이라 도시의 행정, 정치, 복지 증진이 행정의 관심이다. 도시 사회를 핑계 삼아 거대한 조직 속에 사람을 몰아넣고 조직의 기능에 순응하도록 관리 기술을 발휘하는 사회다. 관료 조직으로부터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능적이며 지배체계 속에 묶여있다. 이런 구속감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 가고 있다. 또 대중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틀 속에 갇혀 보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어쩔 수없이 자기를 버리고 대개는 저질적인 문화의 분류 속에 떠밀리며 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구속은 벗고 살 수 없는가 생각해 본다. 내 모습,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과연 살 수 없는 것인가? 참으로 사람 노릇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델이 무엇일까?

사람은 나름대로 각기 자기 완성의 꿈을 안고 산다. 그러나 가중되는 무게에 못이겨 어느 숱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잃고 거대한 사회 조직 속에 자신을 맡기고 매몰돼 가고 있다. 때로는 속물시하며 물질의 쾌락 추구에 몰입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청푸른 색깔로 서 있기를 다짐하던 내가 어느 사이 군중 속의 나를 속이고 순수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색깔 없이 살아가면서 삶에 무관심하고 있다. 습관적인 삶, 반복적인 복제된 삶을 살고 있다. 대중문화의 노예로 자기 성찰도 개성 추구도 거세된 채, 짜여진 삶의 구도 속에서 휘청거리며 살고 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삶의 본령(本領)은 어디일까?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종전의 물질적 풍요라는 데서 나아가 지적, 심미적 만족을 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부의 증식, 물질적 소유라는 일차적 욕구가 지향되고 미적 만족, 사랑, 존경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양에서 질로 바뀌고 있다고나 할까? 그러면 사람다운 삶, 곧 질 높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삶의 문제는 순전히 본인의 체험과 느낌이라는 주관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관찰되거나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평가될 수가 없는 일이여서, 보편적 기준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먼저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과 존경에의 욕구,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존경이나 사랑받는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 자기를 비우고 내주어 버리는 삶이다. 철저하게 자기 절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삶이다. 자연은 우리 사람에게 철저하게 바치고 퍼주는 것처럼 우주적 질서에 맞는 삶이 질 높은 삶인 것이다. 그리고 또 대중 사회에 꼭 필요 가치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필요한 존재는 스스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존재는 또 스스로도 필요한 존재를 끌어오게 된다. 삶의 의미는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로 성장하는데 있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가 있을까마는 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꼭 필요한 존재는 스스로도 존재의 이유를 지니게 된다.

사람은 전부를 창조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바다, 그 부여받은 바를 헛되이 쓰라는 것이 아니다. 욕구의 노예가 아닌 창조의 신께서 바라시는 창조 질서 보전의 삶을 이루려 노력하는 삶이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社說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불균형 시정 계기로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호남권의 두 배가 넘는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호남 등 낙후 지역을 배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현재 모두 74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다. 대전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41개, 세종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21개 기관이 있다. 충북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있다. 여기에 정부 대전 청사와 정부 세종 청사도 충청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영남권에도 69개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다.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21개, 대구와 경북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6개, 경남과 울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2개 기관이 모여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인 2004년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전북으로 이전된 12개를 합쳐도 모두 28개로 충청권과 영남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이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만큼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 시도에 기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낙후 지역에 집중 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해 국토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팀을 꾸려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 정보통신, 해양, 환경 분야의 21개 기관을 타깃으로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도 열악한 광주·전남의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천일염 생산 갈수록 감소…인증 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품 소금이라는 프랑스 게랑드 혹은 뉴질랜드나 호주산 천일염에 비해 훨씬 많은 미네랄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천일염 산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3년 1249개소였던 천일염 업체는 지난해 1111개소로 4년 사이에 138곳이 감소했다.

전체 천일염 생산 업체의 90%가 분포해 있는 신안군 지역 업체가 951곳에서 859곳으로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천일염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 2013년 약 42만 톤에 달했던 생산량은 2017년 약 30만8000 톤으로 11만 톤가량 줄었고, 이 중 신안군에서만 약 8만4000톤(75%)이 감소했다.

천일염 농가들은 산지 가격 하락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1kg당 308원이었던 산지 가격은 2017년 159원으로 48%가량 하락했다. 저가의 외국산 천일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국내산 천일염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가운데 천일염 인증 장벽이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일염 인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인증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체 1153개 천일염 업체 중 전남 지역의 경우 단 2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천일염 생산 농가들이 보다 쉽게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광주 퀴어 축제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queer)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 시절, 뉴욕시 한복판인 그리니치빌리지에는 게이바가 밀집해 있었고 경찰들의 단속도 빈번했다.

1969년 6월 28일 경찰이 이곳에 있는 '스톤월 인'이란 게이바를 급습했다. 동성애자들은 평소 같으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흩어졌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폭력이 그동안 쌓인 동성애자들의 감정을 폭발시켜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7월 3일까지 이어진 폭동을 계기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조직됐고 스톤월 항쟁은 전 세계 성 소수자들에게 기념비적인 역사가 됐다.

1980년대 중반, 광주도 1960년대 뉴욕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동성애자들은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일부만 게이바에서 공개적으로 일하던 시절이다. 대학 1학년이던 1986년 어느 날, 호기심이 동해 형을 따라 가 본 충장로 게이바는 문화적 충격이라 할 만큼 놀라웠다. 무대에선 예쁜 여성이 춤을 추고, 이들과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클럽을 나온 후에야 그들이 게이(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는 성 소수자들이 길거리에까지 나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두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세상이 됐다. 이들이 벌이는 '퀴어 축제'가 국내에 선을 보인 지도 19년이 됐다. 2000년 9월 연세대에서 처음 시작된 축제는 홍대·신촌·이태원·종로·광화문·서울광장 등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2009년에는 지방에선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됐고 지난해 제주와 부산에서도 열렸다. 올해는 인천과 전주로 점차 축제가 확산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에서도 오는 21일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인권 도시 광주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찬성 입장에 맞서 종교계는 가치관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사 장소를 5·18민주광장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논쟁이 일고 있다. 민주화를 이끈 '광주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톤월 인'이 미국의 역사 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1001곳으로 선정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